

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

-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
 -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므로 환각물질의 섭취·흡입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더라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대한 제한이 아니다.
 -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.
 -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.
 -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5년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임대인의 기대 내지 신뢰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이를 확정적이거나 절대적인 기대 내지 신뢰라고 보기는 어렵다.
- 헌정사와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제9차 개헌에서 체포·구속통지와 체포·구속적부심제도가 도입되었다.
 - 제8차 개헌에서 적정임금 보장과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규정하였다.
 - 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은 기명투표로 한다.
 - 헌법개정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.
- 국적과 헌법전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.
 -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관련된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.
 - 3.1정신에 기하여 곧바로 개별적 기본권을 도출해낼 수 있다.
 - 3.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

다는 헌법전문에 기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
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가 인정된
 다.

-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군인 퇴역연금 지급권자가 사립학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시행령에 따라 군인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.
 - 범칙금 미납자에 대하여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.
 -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사후적 절차참여 기회를 보장하였다면, 사전통지나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만으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.
 - 행정법정 방청석에서 수형자에게 재판시작 전까지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다.
- 정당과 선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 - 정당등록이 취소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정당에게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인정할 수 없다.
 - 정당의 소유재산 귀속관계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.
 -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에게도 명함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한 「공직선거법」 조항은 배우자 없는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.
 -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되는 경우 이미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반환받은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대한 위반이 아니다.
- 사회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- 국민연금제도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한다.
 - 「국민건강보험법」상 보험료의 국고지원에 있어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차별은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.
 - 연금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법률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.
 -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직접적인 직장존속 청구권이 도출될 수 있다.

7.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주민소환의 청구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.
- ② 일부 조항이 위법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이 있으면, 위법한 일부 조항만 그 효력이 부인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지방의회의원,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- ④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부여한 것은 권력분립원칙에 대한 위배이다.

8.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과잉금지원칙은 기본권 보호의무 위배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이 될 수 있다.
- ②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게 인정되지만, 태아에게 민법상 권리능력을 인정할 것까지 헌법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.
- ③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.
- ④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의 사용에 대한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 이행한 것이다.

9.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라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.
- ③ 공사와 공단, 공공조합 등 공법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.
- ④ 인간의 권리에 관하여 외국인에게 기본권이 인정되지만, 불법체류자의 경우 그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.

10.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언론의 자유와 반론권이 충돌하는 경우 규범조화적 해석이 적용될 수 있다.

- ② 유치원의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안에 당구장시설을 금지하는 학교보건법 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.
- ③ 디엔에이감식시료 영장 발부 대상자에 대하여 사전 의견을 밝히거나 사후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법률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.
- ④ 수용자가 작성한 집필문의 외부반출을 불허하고 이를 영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.

11. 헌법 제10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수용자에 대하여 전자영상 검사기를 사용한 항문 부위 검사는 수용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.
- ②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출소 예정자에게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한 「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」 부칙 경과조항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.
- ③ 구치소 수용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개별가구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.
- ④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것은 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.

12. 평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불특정인에 대한 성매매만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.
- ② 여론조사에서 평균지지율이 100분의 5 미만인 후보자를 제외하고 개최한 언론기관의 대담토론회는 평등권 위반이다.
- ③ 친고죄 고소의 취소기간을 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항소심에서 고소취소를 받은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.
- ④ 국립대 교원에게는 정당가입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초·중등 교원에게만 정당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다.

13. 신체의 자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

- ① 병(兵)에 대한 영창처분을 규정한 군인사법 조항은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된다.
- ②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영창처분을 규정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다.
- ③ 헌법상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부터 적용된다.
- ④ 피의자신문 시 참여 변호인에게 피의자의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만으로는 변호권 침해가 아니다.

14. 거주·이전의 자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적포기나 국적변경, 해외이주, 해외여행, 귀국은 거주·이전의 자유에 포함된다.
- ② 테러위험이 있는 해외 위난지역에서의 여권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거주·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.
- ③ 90일 이상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의 자격제한 규정은 거주·이전의 자유는 문제되지 않는다.
- ④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소재한 주거용 건물이 수용됨에 따라 거주지를 변경해야 하므로 거주·이전의 자유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15.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 시 금고 이상의 실효된 형까지 범죄경력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.
- ②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십이지문을 찍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규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.
- ③ 통신의 상대방에 대하여 통신영장 집행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이다.
- ④ 개인정보 보호법 상 사자에 대한 정보나 법인, 단체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.

16.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사법경찰관은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는 경우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.

- ② 인터넷 회선에 대한 패킷감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.
- ③ 발신되어 전송 중인 전기신호에 대한 인터넷회선 감청은 압수·수색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④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.

17.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양심적 입영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비례원칙에 따른다.
- ② 현역군인을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시켜 시위집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.
- ③ 양심상의 결정이 법질서나 사회규범·도덕률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.
-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범위반사실의 공표명령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.

18. 언론·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허위사실표현은 언론·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- ② 정정보도청구권은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조건으로 한다.
- ③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'인터넷선거보도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'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.
- ④ 법원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 검열이 아니다.

19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.

- ① 옥외집회신고서 반려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② 집회 참가자에 대한 사진촬영은 집회·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집회·시위의 신고 범위를 벗어난 동안에 참가자들을 촬영한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

않는다.

- ③ 의료급여수급권과 개인택시면허는 헌법상 재산권이 아니다.
- ④ 성판매자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.

20.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국민투표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.
- ②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의 선거권을 확일적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.
- ④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.

문항	정답
1	④
2	①
3	③
4	②
5	①
6	④
7	①
8	①
9	④
10	④
11	②
12	①
13	①
14	④
15	③
16	②
17	④
18	①
19	②
20	④